

조사동향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이후의 한국의 사회동향: 2003-2021 한국종합사회조사*

김지범**

본 논문은 21세기 20년간의 사회동향을 기술한다. 2003-2021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이전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태도와 믿음의 변화를 먼저 살펴본 후, 코로나19가 이런 태도와 믿음에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행복 수준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생활 만족도는 미미하게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행복과 생활 만족도는 낮아졌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반은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를 언급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어떤 문제도 16%가 넘지 않는다. 2018년 정치 상황 만족도는 최고로 높은 26%였지만 2021년에 13%로 떨어졌다. 2010년대 '사회의 모든 집단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영역에서 자긍심은 30%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58%로 크게 높아졌다. 2018년을 제외하고, 국민은 2008년부터 북한을 덜 가깝게 느끼게 되었는데 2021년 단지 5%만이 북한을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줄었다(55%). 국민들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대해 덜 동의하게 되었고, 정부가 실업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덜 찬성하게 되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더 동의하게 되었다. 환경에 대한 위험 인식이 다시 반등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비용 및 세금 지급 혹은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은 크게 줄었다. 전반적으로 기관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낮아졌지만 예외적으로 대기업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역대 최고인 81%가 되었다. 종교 없는 사람들이 56%이며, 국민 10명 중 1명은 점쟁이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믿고 있고, 10명 중 2명은 사주가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혼전 성관계와 동성 성교의 수용성은 높아지다가 낮아졌다. 미래 자녀의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는 하강했으며, 인생성공에서 부모의 부와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 같다.

주제어: 코로나19, 사회동향,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북한, 정부의 책임, 정부 지출, 기관 신뢰, 국가자긍심, 인생성공요인

*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3A2A03096777).

논문을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과 2021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 생산 및 정제 작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갤럽 장덕현, 김민재, 석범진,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 김솔이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jbk7000@skku.edu).

I. 들어가며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다. 얼굴의 일부만이 되어가는 마스크와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가 진행 중이다. 책의 제목처럼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헤럴드 2020)을 향한 여정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세상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왔다. 2022년 1월 26일까지 한국에서는 약 6천 6백 명이 사망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562만 명이 사망했다. 코로나 상황을 가져온 사회에 대한 성찰,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예측,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슈밥·말르레 2021; 지젝 2020; 최재천 외 2020).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한국의 사회변화는 20세기 압축적 근대화에 토대를 둔다. 20세기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급격한 경제성장도 이루었고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도 달성했다. 근대화이론에 따르면 경제 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는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를 가져오는데, 경제 및 신체적 안전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materialism)적 가치에서 자기표현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가치로의 전환을 이끈다는 것이다(Inglehart 1997). 이러한 가치 변화 이론이 한국에서 가능할지 확신이 없다. 최근에도 한국 사회 풍토는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과거 경험 때문에 불신이 만연하고,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가 도래했지만 적응하지 못하여 불만이 많고, 노후 준비가 안 되어 불안이 큰 사회로 ‘불신, 불만, 불안’의 3불 사회(이재열 2019:22)의 뒷에 갇힌 것 같기 때문이다.

이 글은 21세기 한국의 지난 20여 년간의 사회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태도는 변화하였는가? 아니면 안정적인가? 또한, 코로나 이전과 달리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 영역을 살펴보면, 한국인은 더 행복해졌는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인가? 한국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영역은 어떻게 변했는가? 세속화는 진행 중인가? 사주의 영향력에 대한 믿음이 바뀌었는가? 사회의 기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가? 동성애를 더 수용하게 되었는가?

원자력 발전 축소에 동의하는가? 환경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했는가? 환경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가?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반대하는가? 인생성공에 부모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시된다고 느끼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 센터에서 수집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이용하여 답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 찾은 여러 태도에 대한 기초적 사실이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먼저 이 글의 여러 한계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첫째, 이 논문은 조사연구의 조사동향 형식(예, 김지범 외 2019)에 맞추었기에 태도의 동향 파악에 머무르며 각각의 태도 변화를 헤안을 갖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변화에 대한 차이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지도 않았다. 세밀하고 깊이 있는 연구는 다음을 기약한다. 둘째, 태도 문항은 시의성(예, 환경)이 있고 향후 사회과학연구에서 주요 관심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반복되는 것으로 추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모든 문항을 2003~2021 모든 조사 연도에서 물어보지 않아 때로는 2번만 반복되는 문항도 이용하였다. 셋째, 이상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모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사회 변화 및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들겠지만, KGSS 자료만으로 국한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직전과 직후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조사에서 조사기관(대학과 조사회사), 조사도구(종이 설문지 대 테블릿과 종이 설문지), 조사원(학생조사원 대 전문조사원) 등이 달라졌다는 점도 밝힌다.

우선 이 글의 바탕 자료인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각각의 태도의 변화를 기술하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이전인 2003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를 서술하고, 코로나 이후인 2021년과 코로나 이전 가장 가까운 연도의 변화를 비교한다.

II. 한국종합사회조사(KGSS)¹⁾

현재도 조사비용 때문인지 조사자료의 품질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2000년대 초까지 사회과학연구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자료는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양

1)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 및 관련 문서 참조: <https://kgss.skku.edu>.

질의 조사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3년 양질의 사회과학 학술자료 창출을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조사비용을 쓰며 시작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석현호 교수(현재 명예교수)가 미국의 3대 사회과학자료이며 1972년부터 구축되어 센서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를 모델로 삼아 한국판 GSS인 KGSS를 출범시켰다(Smith et al. 2006). 간단하게,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조사과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예, 표집틀 작성, 표본 대체 불가 등) 전반적 조사오류(total survey error)를 최소화하여 대한민국 성인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양질의 자료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많은 연구자와 학생들의 헌신과 한국연구재단, 성균관대학교 재단 그리고 연구자들의 조사경비 지원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반복횡단조사(repeated cross-sectional study)로 총 20,841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응답률은 2000년대 초반 60% 중반이었지만 최근에는 40~50%로 감소했다. 자료 수집은 전국대학 컨소시엄이 기반이 되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2003~2014) 혹은 격년(2016, 2018) 조사에 116명의 교수와 2,797명의 학생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여 19,636명의 응답자를 면접 조사해서 자료를 구축했다. 2020년에 계획된 조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2021년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조사했다.²⁾ 자료 수집은 전국대학 컨소시엄 대신에 조사회사에 의뢰하였고 1,205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2003~2021년까지 축적된 자료의 유용함은 2021년 1월까지 무려 1,926편의 국내·외 저서(170개), 석·박사 논문(외국어 112개/국어 123개), 저널 논문(외국어 546개/국어 447개), 학회발표 및 보고서(538개)에 이용되어 명실상부한 한국 사회과학의 토대자료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지는 반복핵심문항, 국제비교문항, 그리고 연구자가 제안한 문항으로 구성된다(김지범 외 2019). 첫째, 반복핵심문항은 국제비교를 의도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물어본 문항이다(예, 북한에 대한 태도). 둘째, 국제비교문항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1)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은 1984년에 설립되어 현재 세계 4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조사이다(www.issp.org 참조). 1985년 정부의 역할 모듈을 시작으로 10개의 다른 주제의 문항(약 70문항)을 매년 공동 조사하며

2)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는 현재 2021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정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에 2003-2021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주제들이 거의 10년에 한 번씩 반복된다. 2020년 주제는 1993, 2000, 2010년도에 물어본 환경으로 2021년에 한국종합사회조사에 포함되었다. (2) 동아시아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EASS)는 미국 GSS 모델로 구축된 일본의 오사카상과대학의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JGSS), 중국 인민대학의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CGSS), 대만 중앙연구원의 Taiwanese Social Change Survey(TSCS),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조사한다(www.eassda.org 참조). 2006년 가족 모듈을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10년마다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 2021년에 조사된 주제 모듈은 2010년에 물어본 건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조사경비를 지불하는 연구자 제안 문항이 있다. 2021년 제안 문항은 코로나19, 소득 격차 해소 의견, 기본소득, 정치참여, 민주주의이다.

III. 주제별 동향³⁾

1. 행복감, 생활만족도, 가계상태 만족도

해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조사연구자들이 단순 포괄적인 주관적 웰빙 문항을 물어보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해왔다(Diener et al. 2009:187).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국민들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한준 2021:373). 코로나 이전까지 행복은 변화가 없었고, 생활만족도와 가계상태 만족도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행복감, 전반적 생활만족도, 그리고 가계상태 만족도가 모두 낮아졌다. 2021년 전에는 거의 국민의 반이 행복하다고 했지만, 2021년에는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 5%를 포함하여 38%만 행복하다고 답했다.<표 1> 참조). 2021년 생활만족도 또한 행복감과 조응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국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은 34%에 그쳤다.<표 2> 참조).

3) 표(1부터 24까지)에서 보여주는 변화 차이(B-A)의 값은 소수점 이하 수치로 인하여 표의 B 값에서 A 값을 뺀 때의 수치와 다를 수 있다.

<표 1> 행복감

(단위: %, %p)

※ 귀하의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행복 (1)	(2)	(3)	(4)	매우 불행 (5)	N
2009	13	36	39	10	2	1,599
2010	13	34	42	8	2	1,563
2016(A)	12	37	39	9	2	1,050
2021(B)	5	33	46	15	1	1,200
변화(B-A)	-7	-5	7	7	-1	

<표 2> 생활만족도

(단위: %, %p)

※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요즘 귀하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1)	(2)	(3)	(4)	매우 불만족 (5)	N
2006	7	31	40	17	5	1,603
2009	8	32	42	14	4	1,599
2016(A)	11	38	40	9	2	1,046
2021(B)	2	32	48	16	1	1,206
변화(B-A)	-8	-6	7	7	-1	

<표 3>은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세부적 영역으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가계상태 만족도의 결과이다. 200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가 2016년과 2018년에 47%까지 증가했다. 2021년에는 30% 아래로 떨어져 2000년대 초반의 만족도와 유사해졌다. 단, 만족의 축소가 불만족의 증가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응답의 증가를 불러왔다.

<표 3> 가계 상태 만족도

(단위: %, %p)

※ 귀댁의 경제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N
2003	3	26	21	35	15	1,312
2004	2	26	19	38	16	1,307
2005	3	26	27	33	11	1,604
2006	3	29	26	32	9	1,593
2008	5	26	26	32	10	1,500
2009	6	29	29	29	8	1,593
2010	7	26	29	28	9	1,573
2011	7	30	25	28	10	1,532
2012	7	26	27	30	10	1,385
2016	11	36	26	21	6	1,049
2018(A)	8	39	25	22	7	1,023
2021(B)	2	27	42	25	4	1,203
변화(B-A)	-6	-12	17	3	-4	

2. 자살 태도

한국의 자살률은 2020년 십만 명당 25.7(13,195명)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9.28). <표 4>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2013년보다 2018년에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 ‘파산했을 경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을 경우’, ‘사는 것이 피곤해서 죽고 싶을 경우’의 4문항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크게 증가하였지만(9%p), 다른 문항에서는 약간만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8년과 비교하여, 코로나 이후 모든 문항에서 자살을 덜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18%p 급격하게 줄어든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의 자살할 권리로 10명중 3명 정도 동의하게 되었다. ‘코로나 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 레드(분노)’, ‘코로나 블랙(절망)’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최인수 외 2020:79-80), 자살에 부정적인 태도는 증가하였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처절하고 암울한 상황이 역설적으로 자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 같다. 향후 코로나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면 다시 자살에 대한 태도가 뒤집힐지 의문이다.

<표 4> 자살 태도

(단위: %, %p)

※ 자살과 관련한 다음의 각 의견에 귀하가 동의 또는 반대하시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한 경우 자살할 권리가 있다.’				
	불치병을 앓고 있을 경우	파산했을 경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을 경우	사는 것이 피곤해서 죽고 싶을 경우
2013	43	14	11	10
2018(A)	52	17	14	14
2021(B)	34	9	6	9
변화(B-A)	-18	-8	-7	-5

주: 표 안의 숫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3.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

조사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Most Important Problem, MIP)는 1930년대에 개발되어 공중의제를 측정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문항이다(Yeager et al. 2011).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회의 모습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폐쇄형뿐만 아니라 개방형 문항으로도 빈번히 사용되는데, 폐쇄형은 주어진 응답범주에서 응답을 선택하니 폐쇄형과 개방형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나타난다(김지범 외 2017).

<표 5>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로 폐쇄형 문항에 기초한 것이다. 경제와 범죄는 유일하게 모든 연도에서 10% 이상이 응답한 문제이다. 2016년과 2021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비교하면, 경제는 14%p, 환경은 11%p, 의료는 7%p 증가했지만 범죄와 교육은 10%p정도 낮아졌다. 코로나 이전 경제, 범죄, 교육 순으로 중요한 문제가 자리매김했던 것이, 2021년에는 경제, 환경, 그리고 범죄와 의료보호 순서로 변화였다. 2021년 환경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

고, 경제(50%)가 다른 어떤 문제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2010년 범죄는 경제와 거의 차이 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만, 범죄는 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모든 문제가 경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 같다.

<표 5>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 (단위: %, %p)

※ 다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오늘날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환경	범죄	의료보호	교육
2010	31	8	30	9	15
2016(A)	36	5	23	4	16
2021(B)	50	16	12	11	6
변화(B-A)	14	11	-11	7	-10
	빈곤	기타	외국인 국내 이주	테러	N
2010	6	1	1	1	1,549
2016(A)	6	3	2	4	526
2021(B)	3	1	1	0	1,199
변화(B-A)	-3	-3	-2	-4	

4. 정치성향과 정치 상황 만족도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하상우 2021),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대통령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표 6>은 국민들의 정치성향 분포이다. 2003~2018년까지의 정치성향의 평균을 살펴보면 매우 진보적 5%, 다소 진보적 29%, 중도 32%, 다소 보수 29%, 그리고 매우 보수 5%로 구성되어서, 국민 세 명 중 한 명씩 (매우+다소)진보, 중도, (매우+다소)보수로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다. 이런 전형적인 균형을 깨 팔목할 만한 연도는 2003년과 2018년이다. 2003년에는 보수(42%)가 진보(31%)보다 11%p 많아 보수로 기울어짐이 있었고, 2018년에는 진보(46%)가 보수(22%)보다 무려 24%p 많아 진보로의 쏠림이 있었다. 2021년에도 진보(35%)가 보수(26%)보다 많지만 그 차이는 9%p 정도로

줄었다. 2021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진보의 감소, 보수의 약간 증가, 그리고 중도의 증가로 생각할 수 있다.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수로 선회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표 6> 정치성향

(단위: %, %p)

※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N
2003	5	26	27	35	7	1,222
2004	4	29	29	34	3	1,246
2005	2	29	32	33	4	1,505
2006	4	27	34	32	4	1,533
2007	3	27	37	29	4	1,378
2008	4	24	35	31	6	1,469
2009	4	30	32	29	5	1,528
2010	5	27	35	27	6	1,500
2011	5	30	31	29	5	1,434
2012	7	30	29	27	7	1,319
2013	6	28	31	30	5	1,279
2014	6	31	29	30	5	1,365
2016	3	30	38	25	4	1,023
2018(A)	7	39	33	18	4	1,002
2021(B)	6	29	39	21	5	1,166
변화(B-A)	-1	-10	7	3	1	

2003년부터 국민은 정치 상황에 30% 이상 만족한 적이 없었으며 다수가 정치 상황에 대해 불만족이다(<표 7>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에 대해 2000년대 초반 최대 80%를 넘던 불만족이 최근 60%까지 줄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감소이다. 2021년은 2018년과 비교하여 정치 상황 만족이 13%p 떨어졌지만, 2018년은 2013년과 함께 유일하게 만족이 20%가 넘는 예외적인 경우, 지난 20년간 정치 상황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해였다.

<표 7>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p)

※ 귀하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N
2003	1	6	12	35	47	1,287
2004	1	6	12	38	43	1,283
2005	1	6	19	40	34	1,580
2006	1	8	18	39	35	1,576
2007	1	8	21	37	33	1,421
2008	1	10	16	38	35	1,497
2009	1	7	23	39	29	1,583
2010	2	12	25	39	23	1,545
2011	1	13	24	39	23	1,507
2012	1	12	22	40	25	1,381
2013	3	20	24	36	17	1,270
2014	2	14	21	42	22	1,368
2018(A)	2	24	19	40	15	1,021
2021(B)	0	13	28	37	22	1,195
변화(B-A)	-2	-11	8	-2	7	

5. 국가 자긍심

국가 자긍심(national pride)은 국가 정체성의 결과로 국민이 국가에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적 유대로 애국심 혹은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Smith & Jarkko 1998). <표 8>은 특정 영역에서 한국인의 국가 자긍심을 보여준다. 한국인의 국가 자긍심 1순위는 스포츠이고 마지막 순위는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로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인은 스포츠, 과학기술, 역사,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 순서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움이 매우 낮았다. 2013년 이후를 볼 때 사회보장제도와 민주

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증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모든 영역에서 자랑스러움의 감소는 없고,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25%p), 사회보장제도(17%p),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11%), 세계에서 정치적 영향력(8%p) 순으로 자랑스러움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군사력, 세계에서 정치적 영향력,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만 60% 이하이다. 사회보장제도와 특히,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놀라운 증가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에 대한 자긍심이 아직도 낮은 점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당면 현안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8> 국가 자긍심

(단위: %, %p)

※ 다음 각각에 대해서 귀하는 한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에서의 성취	과학기술의 성취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	사회보장제도	역사
2003	89	66	61	18	74
2013	92	81	75	43	77
2016	83	75	68	42	73
2018(A)	83	79	71	59	74
2021(B)	84	82	82	76	76
변화(B-A)	0	3	11	17	2
	경제적 성취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군사력	세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2003	46	35	35	18	17
2013	74	56	53	53	31
2016	65	48	51	45	27
2018(A)	74	70	55	51	33
2021(B)	74	72	59	59	58
변화(B-A)	-1	2	4	8	25

주: 표 안의 숫자는 ‘매우+약간 자랑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6. 북한, 남북통일, 한반도 전쟁 가능성

대한민국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할까?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들었으며 승자 없는 휴전으로 막을 내렸다. 어느덧 70년이 되어 가는 남북의 휴전 상태는 통일이라는 희망과 절망을 뒤섞어 놓은 후 희망일 뿐 절망만 재인식하게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1947년 만들어진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는 1948년 ‘독립’이 ‘통일’로 바뀌어(중앙일보 2006) 아직도 한겨레의 염원을 표명하고 있다.

<표 9> 국가 선호도(단위: %, %p)

※ 귀하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N
2003	50	11	28	10	1	1,202
2004	46	10	30	13	1	1,235
2005	49	7	30	13	1	1,499
2006	53	6	28	11	2	1,541
2007	52	9	28	8	2	1,370
2008	55	11	23	9	3	1,436
2009	66	11	16	7	1	1,530
2010	75	8	13	4	1	1,513
2011	73	9	12	5	1	1,445
2012	71	7	15	5	1	1,333
2013	75	6	10	8	1	1,264
2014	74	5	9	11	1	1,367
2016	72	8	9	11	1	1,022
2018(A)	56	13	25	6	1	963
2021(B)	84	6	5	3	1	1,140
변화(B-A)	29	-7	-20	-2	0	

<표 9>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국가 선호도이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북한, 일본, 중국 선호도는 감소 추세이며, 러시아 선호도는 변동이 없다. 이례적으로 2018년은 미국 선호도가 감소하고 북한 선호도가 증가한 해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반영한 것 같다. 2018년과 비교하여 2021년은 미국 선호도는 역대 최고인 84%로 29%p 증가한 반면 북한 선호도는 20%p, 일본 선호도는 7%p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선호도와 북한의 선호도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선호도가 일본과 비슷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표 10> 북한에 대한 인식(단위: %, %p)

※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N
2003	21	38	31	10	1,266
2004	20	40	32	9	1,275
2005	17	45	28	9	1,543
2006	18	38	33	11	1,569
2007	20	41	29	10	1,405
2008	20	35	35	10	1,485
2009	15	32	36	17	1,558
2010	13	25	40	23	1,549
2011	14	21	47	18	1,504
2012	13	24	43	19	1,370
2013	12	22	47	19	1,274
2014	16	20	43	21	1,367
2016	9	21	50	20	1,039
2018(A)	17	45	29	9	1,013
2021(B)	14	29	42	15	1,191
변화(B-A)	-3	-16	13	6	

<표 10>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민의 과반수가 북한을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으로 판단했지만, 2009년 이후로는 과반 이하로 떨어지

다가 2018년에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식이 최고조에 달했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의 소폭 감소(-3%p)와 협력대상(-16%p)이라는 인식의 대폭 감소가 일어났고, 경계대상이 협력대상보다는 13%p 더 많다. 2021년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대대상으로 생각하는 국민보다 거의 3배 정도 더 많다. 북한에 대하여 가깝다고 느끼는 태도의 감소와 관련된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살펴보면(<표 11> 참조),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적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은 남북통일이 필요(매우+다소)하다라고 응답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10명 중 겨우 1명만 남북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2021년 이전의 국민 10명 중 3명이 남북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서 커다란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12>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전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높게(매우+다소)평가한 국민은 10명 중 3명 이하이다.

<표 11> 남북통일 필요성

(단위: %, %p)

※ 귀하는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N
2003	39	41	17	3	1,304
2006	36	39	22	4	1,586
2007	36	39	21	5	1,427
2008	33	39	23	5	1,497
2009	34	38	22	6	1,575
2010	35	36	22	7	1,562
2011	32	36	25	7	1,514
2012	33	38	23	6	1,376
2013	31	39	25	6	1,278
2014	31	40	21	7	1,369
2016	35	35	24	5	1,039
2018(A)	33	42	21	4	1,018
2021(B)	10	45	37	8	1,194
변화(B-A)	-22	3	16	4	

<표 12>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단위: %, %p)

※ 귀하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다소 높다	별로 높지 않다	없다	N
2003	4	27	53	16	1,261
2018(A)	2	15	64	19	1,006
2021(B)	2	20	64	14	1,183
변화(B-A)	-1	5	0	-5	

7. 정부의 책임과 정부 지출

헌법 제 34조 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때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표 13> 정부의 역할: 빈부격차 완화, 실업자 생활수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 (단위: %, %p)

※ 귀하는 다음의 주장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실업자들도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2003	80	-	-
2009	75	82	10
2010	69	-	-
2011	65	69	12
2014(A)	69	63	13
2021(B)	54	41	27
변화(B-A)	-15	-23	15

주: 표 안의 숫자는 ‘매우+다소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표 13>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격차 축소, 실업자의 생활수준 유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관한 국민들의 응답이다. 이 세 문항 모두에서 정부의 책임 혹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다. 2000년대 국민 10명 중 8명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격차 축소에 대한 정부책임론에 찬성한 반면, 2021년에는 국민 10명 중 5명 정도만이 동조하고 있다. 실업자의 생활수준 유지에 대한 정부책임론 또한 2009년 10명 중 8명이 찬성했지만, 2021년에는 10명 중 4명만이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10명 중 3명은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부 역할에 대한 확대 예상과 달리, 소득재분배와 사회복지가 정부 책임이라는 국민들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향후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표 14> 정부지출의 증감

(단위: %, %p)

※ 다음은 여러 가지 정부지출 분야들입니다. 각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야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하가 ‘훨씬 더 늘려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금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환경	보건	치안	교육
2006	73	82	64	70
2014	66	68	66	56
2016	66	67	67	58
2018(A)	69	68	57	56
2021(B)	66	57	55	38
변화(B-A)	-3	-12	-2	-18
	국방	노인연금	실업수당	문화예술
2006	38	78	52	39
2014	47	55	42	36
2016	39	54	44	28
2018(A)	31	45	32	32
2021(B)	34	30	21	22
변화(B-A)	4	-14	-10	-10

주: 표 안의 숫자는 ‘훨씬+다소 늘려야’라고 응답한 비율임.

<표 14>는 세금인상이라는 조건하에서 여러 분야의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국민

들의 인식이다. 2000년대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2010년대는 모든 분야에서 정부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6년 정부지출 증가가 필요한 분야로 국민 10명 중 최소 7명은 보건(82%), 노인연금(78%), 환경(73%), 교육(70%)을 언급한 것과 달리, 고작 10명 중 4명 정도만 문화예술(39%)과 국방(38%)을 언급하였다. 2018년을 보면 환경(69%), 보건(68%), 치안(57%), 교육(56%) 순서로 지출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 즉, 교육(-18%p), 노인연금(-14%p), 보건(-12%p), 실업수당(-10%p), 문화예술(-10%p)에서의 지출 확대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여러 분야에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 축소는 이 분야들에 대하여 정부가 지속해서 충분히 지출해 왔다는 인식 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염려를 반영한 것 같다.

8. 원자력 발전, 환경 위험 인식, 환경 보호

원자력 발전 유지나 혹은 탈피하는 사회 갈등의 중요한 현안이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혹은 건설 중단 여부는 친원전론자와 탈원전론자의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는데 시민참여형 공론화 조사를 통하여 건설 중단(40.5%)이 아닌 건설 재개(59.5%)로 귀결되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 2020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되었지만 다음 정권에서 재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것 같다.

<표 15>는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이다. 두 연도 모두 원자력 발전 현상 유지가 다수이지만, 2018년에는 축소가 확대보다 12%p 높은 반면, 2021년에는 확대가 3%p 많아졌다. 원자력 발전 축소에 대한 지지가 2018년과 비교하여 14%p 줄고, 현상 유지는 12%p 증가하였고, 확대는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15>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p)

※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자력 발전 확대	원자력 발전 현상 유지	원자력 발전 축소	N
2018(A)	19	50	31	966
2021(B)	21	61	18	1,137
변화(B-A)	2	12	-14	

<표 16>은 다양한 환경 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이다. 2010년부터 2014년을 보면,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위험 인식이 감소하였다. 예외는 원자력 발전소로, 10명 중 6명은 원자력 발전소가 환경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아마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인 것 같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21년을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는 평가는 낮아졌지만 다른 환경위험 요인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평가는 높아졌다. 2021년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환경분야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이며,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 정도는 간신히 과반을 넘었다(52%).

<표 17>에서 보듯이 2010년에서 2014까지의 변화는 환경보호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은 증가하였으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은 미미하게 줄었다. 반면 2021년에는 전반적인 환경 위험인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 지불 의향(-20%p), 더 많은 세금 낼 의향(-17%p), 생활수준 낮출 의향(-8%p) 모두 감소하였다.

<표 16> 환경에 대한 위험 인식 (단위: %, %p)

※ 귀하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 사항이 환경에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에 의해 생기는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의 상승	농약이나 화학물질	
2010	70	68	67	
2014(A)	60	58	51	
2021(B)	76	72	68	
변화(B-A)	16	14	17	
	농산물의 유전자 변형	한국의 강, 호수, 개울에 생기는 오염	자동차에 의해 생기는 대기오염	원자력 발전소
2010	55	55	57	43
2014(A)	50	49	47	59
2021(B)	57	57	55	52
변화(B-A)	8	9	8	-7

주: 표 안의 숫자는 ‘절대적으로+매우 위험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표 17> 환경보호를 위해 변화할 의향

(단위: %, %p)

		※ 귀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생활 수준을 낮출)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매우+약간 의향 있음	의향 있지도 없지도 않음	별로+전혀 의향 없음
더 많은 비용 지불 의향	2010	60	16	24
	2014	67	16	17
	2021	47	33	20
더 많은 세금 낼 의향	2010	51	16	33
	2014	57	18	25
	2021	40	31	28
생활수준 낮출 의향	2010	44	17	40
	2014	42	22	36
	2021	34	36	30

9. 사람들과 기관 지도자에 대한 신뢰

1) 사람들에 대한 신뢰

코로나에 잘 대응한 사회의 특징으로서 지도자와 지도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신뢰와 공익을 생각하는 연대의식이 거론되고 있는데(슈밥·말르레 2021:97), 신뢰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의 기반이다. 또한, 국민의 기관에 대한 신뢰는 기관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Niemi et al. 1989:93). <표 18>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명확한 추세 변화가 있지는 않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이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보다 거의 모든 연도에서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2018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는 대체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증가했지만, 국민의 반은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머지 반은 조심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표 18>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

(단위: %, %p)

※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N
2004	3	34	49	14	1,301
2007	3	44	42	11	1,428
2008	4	37	49	11	1,502
2010	5	38	40	17	1,556
2011	5	40	43	11	1,513
2012	3	37	47	13	1,397
2014	5	46	42	7	1,370
2016	6	39	46	10	1,051
2018(A)	5	41	46	8	1,030
2021(B)	2	48	45	5	1,204
변화(B-A)	-3	6	0	-3	

2) 기관(지도자)신뢰

<표 19>는 주요 사회기관의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매우+다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물어본 문항을 먼저 살펴본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 연도에 따라 기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출렁이지만, 대체로 의료계, 금융기관, 교육계,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부처는 신뢰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학계, 청와대, 국회에 대한 신뢰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청와대에 대한 2013년 69%의 신뢰와 2018년 73%의 신뢰는 매우 예외적으로 <표 7>의 정치 상황 만족도가 높은 연도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 기관의 신뢰 수준 상승 및 유지와 다르게, 군대, TV 방송국, 시민운동 단체, 신문사, 종교계의 신뢰는 떨어지는 추세였다. 코로나 이전이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기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상승보다는 감소로 돌아섰다. 가장 두드러진 신뢰 상승은 대기업(22%p)으로 2003년 조사 이래 최고인 81% 수준으

로 치솟았는데, 경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표 5> 참조)에 대기업의 경제 기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학계(-7%p), 대법원(-8%p), 청와대(-13%p), 시민운동단체(-14%p), 노동조합(-12%p), TV방송국(-5%p), 그리고 신문사(-5%p)의 신뢰 수준은 감소세를 보이며, 나머지 기관 지도자에 대한 신뢰의 변화는 없거나 미미하다. 2021년 신뢰 수준을 보면, 의료계, 금융기관, 교육계, 대기업은 80% 이상, 통계청 및 학계는 70%대,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부처, 대법원, 군대, TV 방송국, 검찰청은 60%대, 그리고 청와대, 시민운동단체, 신문사, 종교계는 50%대, 노동조합은 40%대, 국회는 30%대의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9> 지도층에 대한 신뢰

※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귀하는 이 기관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계	금융기관	교육계	대기업	통계청	학계
2003	75	70	68	62	-	80
2004	74	72	66	63	-	80
2005	82	80	70	72	-	85
2006	84	84	72	75	-	85
2007	81	82	69	75	-	82
2008	80	81	70	70	-	83
2009	86	85	74	72	-	86
2010	85	83	65	77	-	83
2011	83	75	70	70	-	81
2012	84	77	74	65	-	79
2013	84	81	73	64	-	81
2014	80	71	69	63	-	74
2016	85	81	75	60	-	82
2018(A)	87	81	79	59	-	81
2021(B)	85	83	81	81	78	73
변화(B-A)	-2	1	2	22	-	-7

(계속)

	여론조사기관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부처	대법원	군대	TV 방송국
2003	-	46	43	71	73	71
2004	-	49	42	76	71	66
2005	-	56	48	81	65	75
2006	-	58	53	79	78	78
2007	-	60	54	80	79	78
2008	-	55	52	75	80	75
2009	-	57	52	76	84	75
2010	-	61	59	76	77	73
2011	-	56	57	76	73	73
2012	-	56	55	69	76	69
2013	75	61	61	72	83	70
2014	64	49	44	64	58	58
2016	69	58	54	70	67	67
2018(A)	71	66	64	71	63	65
2021(B)	67	65	64	63	62	60
변화(B-A)	-3	0	-1	-8	-1	-5

	검찰청	청와대	시민운동단체	신문사	종교계	노동조합	국회
2003	-	55	79	66	66	57	20
2004	-	51	79	56	69	60	17
2005	-	55	78	68	72	59	21
2006	-	60	75	71	69	60	26
2007	-	57	76	71	68	57	25
2008	-	52	71	62	65	58	28
2009	-	54	74	59	67	60	22
2010	-	61	70	63	60	57	29
2011	-	61	75	65	60	62	30
2012	-	50	73	60	59	61	26
2013	-	69	73	64	60	63	31
2014	-	52	64	55	54	55	26
2016	-	52	68	59	57	60	28
2018(A)	-	73	71	59	53	61	31
2021(B)	60	59	57	54	53	49	33
변화(B-A)	-	-13	-14	-5	0	-12	2

주: 표 안의 숫자는 ‘매우+다소 신뢰’라고 응답한 비율임.

10. 종교, 점쟁이, 사주

세속화(secularization)는 종교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는데 근대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의 축소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세속화의 반례로 간주된 미국 또한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며, 가장 큰 요인으로 코호트의 교체를 꼽고 있다(Voas & Chaves 2016). 한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부터 근대화의 시작과 함께 불교와 개신교 신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천주교는 198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Lee & Suh 2017). 한국에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관련 조사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198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0년 주기로 종교정체성(religious identification)에 대한 문항을 조사하고 있는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불교도의 급감과 개신교도의 증가라는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유광석 2021; 이대웅 2016; 임영빈 2019).

<표 20>은 세속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문항인 종교정체성(종교 여부 및 소속)의 추세를 보여준다. 우선, 코로나 이전인 2003~2018년까지 살펴보면 무종교가 가장 많고, 불교,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기타 종교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올수록 불교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유지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세속화는 모든 종교의 감소가 아닌 불교의 감소라는 점이 눈에 띄는 점이다. 하지만, 2021년과 2018년의 차이를 보면 불교는 변함이 거의 없고, 개신교와 천주교의 감소와 무종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개신교는 2003년 조사 이래로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고 종교 없음은 50%를 넘어섰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신교계의 집단 감염과 종교 활동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으로 인하여 개신교와 천주교의 정체성 약화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하다. 코로나 이후 종교 활동 참석이 자유로워질 때 종교로의 회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공식적인 종교의 세속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연 비공식적 종교 또한 변화가 있는지 보겠다. <표 21>은 점쟁이의 미래 예측과 사주의 영향력에 대한 표이다. 지난 10년간 국민 10명 중 1명만 점쟁이가 미래 예측 능력이 있다는 점에 동의(매우+약간)하며 변화는 없다. 반면 국민 10명 중 2명 정도는 사주의 인생(미래) 영향력에 동의(매우+약간)하며 2018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비록 점쟁이와 사주의 예측 능력에 동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트랜스휴먼을 향

해 나아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전통의 지속성이 새삼 놀랍다.

<표 20> 종교인 분포 (단위: %, %p)

※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종교 없음	기타	N
2003	24	20	11	44	2	1,314
2004	28	24	9	38	1	1,311
2005	28	22	9	39	2	1,611
2006	29	20	10	40	1	1,606
2007	28	24	8	39	1	1,429
2008	24	26	9	39	2	1,508
2009	26	24	9	40	1	1,598
2010	25	23	7	44	1	1,576
2011	26	23	9	40	1	1,535
2012	26	21	9	43	1	1,396
2013	24	22	9	44	1	1,294
2014	21	25	11	42	1	1,371
2016	23	21	9	46	1	1,049
2018(A)	19	20	12	48	1	1,027
2021(B)	20	16	7	56	1	1,181
변화(B-A)	1	-4	-5	8	0	

<표 21> 점쟁이와 사주 (단위: %, %p)

※ 귀하는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쟁이들은 정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사주가 그 사람의 인생(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2008(A)	11	21
2021(B)	10	17
변화(B-A)	-1	-3

주: 표 안의 숫자는 ‘매우+약간 동의’라고 응답한 비율임.

11. 성태도: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동성애

한국은 조선시대 500년간의 유교 전통에 따라서, 여성의 정절은 남자의 임금에 대한 충성과 대비되었다. 혼인 전 혹은 혼인 후의 혼외 성관계가 모두 간통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았다(이숙인 2014:68). 2015년에 형사상 간통이 폐지되었다. 동성애에 대한 관심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1992년까지 ‘동성애’를 언급한 뉴스는 100건 미만이었고 2006년에 처음으로 1,000건이 넘었다(빅카인즈 뉴스검색 ‘동성애’ 2021).

<표 22>는 혼전성교, 혼외성교, 동성성교에 대한 태도이다. 모든 연도에서 혼외성교, 동성성교, 혼전성교 순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는데 혼외성교와 동성성교에서는 국민 다수의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혼외성교는 변화가 없었지만, 혼전성교에 대한 비허용성은 25%p 하락했으며, 동성성교의 비허용성도 23%p 줄어들었다. 전통적인 성 규범의 몰락이라는 추세에 2021년 반전이 일어났다. 2018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는 혼전성교(6%p)와 동성성교(15%p)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표 22> 성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 %p)

※ 귀하는 다음의 각 상황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전성교	혼외성교	동성성교
2008	50	90	86
2013	44	91	75
2014	42	91	75
2018(A)	25	89	63
2021(B)	32	85	79
변화(B-A)	6	-4	15

주: 표 안의 숫자는 ‘전적으로+대부분 옳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12. 사회이동: 자녀세대 생활수준 변화, 인생 성공 요인

실질적으로 계층 이동이 감소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김창환·김태호 2020; 정인관 외 2020)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저계급론(금수저, 흙수저)’,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다’, ‘헬조선’, ‘N포 세대’라는 계층 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다.

<표 23>은 자녀세대의 생활수준 변화 예상이다. 2014년까지 최소 70%의 국민은 자녀들의 생활수준이 훨씬 혹은 약간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감소추세인데 2006년까지는 40%가 넘었지만, 이후 2014년까지 30% 정도가 되었다. 2021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16%p 큰 감소가 있어 자녀의 생활수준이 훨씬 좋아질 거라는 낙관적 기대감이 매우 낮아졌다. 물론, 약간 혹은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은 10명 중 2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표 23> 자녀세대 생활수준 변화 예상 (단위: %, %p)

※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의 현재 나이가 될 때 자녀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훨씬 좋아질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N
2003	48	39	7	4	2	904
2004	45	40	8	5	2	880
2005	49	39	8	3	1	1,071
2006	43	40	11	4	1	1,568
2010	36	41	15	6	1	1,537
2011	38	42	12	6	2	1,498
2012	34	41	15	8	2	1,355
2013	28	44	17	8	3	1,263
2014(A)	30	41	19	8	3	1,365
2021(B)	13	45	28	12	2	1,186
변화(B-A)	-16	5	9	3	-1	

주: 2003-2005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질문하였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노력, 야망, 학력 등을 통하여 획득한 성취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좋은 사람을 아는 것, 집안, 인종, 성별 등은 비능력주의의 요소이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박권일 2021:9)이라는 문제를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표 24> 인생성공 요인

(단위: %, %p)

※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람을 아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야망을 갖는 것	본인의 좋은 학력	부유한 집안 출신	
2009	77	87	70	58	44	
2014(A)	76	79	63	57	45	
2021(B)	79	77	67	66	63	
변화(B-A)	3	-2	4	9	18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	정치적 연고	인종	종교	뇌물을 주는 것	성별
2009	39	26	8	13	7	12
2014(A)	39	30	12	10	10	25
2021(B)	60	34	25	21	20	15
변화(B-A)	22	3	13	11	10	-10

주: 표 안의 숫자는 ‘절대적으로+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표 24>는 ISSP의 사회불평등 모듈 문항으로, 성공 요인에 관한 능력적, 비능력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이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인생성공 요인으로 좋은 사람을 아는 것을 제외하고 능력적인 요인이 비능력적인 요인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만연하였다. 능력적 요인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야망을 갖는 것은 감소하였고, 학력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부모의 부와 학력 또한 변하지 않았었다. 2021년에 인생성공 요인으로 최소 10명 중 6명이 좋은 사람을 아는 것(79%), 열심히 일하는 것(77%), 야망을 갖는 것(67%), 본인의 학력(66%), 부유한 집

안 출신(63%), 부모 학력(60%)순으로 언급했다.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야망은 약간 증가되고 학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놀라운 변화는 2014년 조사 대비 2021년에 부모의 부와 학력의 중요성이 거의 20%p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비능력 요인인 인종, 종교, 성별의 중요성은 30% 이하이지만, 인종과 종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성별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인생성공에 대하여 비능력 요인을 더 중요시하는 추세는 개인의 능력 요인이 부모의 능력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최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역할에 대한 반대 증가<표 13>,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에 대한 자긍심의 증가<표 8>, 그리고 본인의 좋은 학력과 부모의 부와 교육의 중요성의 증가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의문이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20년간의 한국의 사회변화를 다양한 태도로 살펴보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도 알아보려고 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한국인의 태도와 믿음이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변했다. 국민들은 경제를 압도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대기업 지도자에 대하여 유례없는 신뢰를 보인다. 행복감, 생활만족도, 그리고 가계상태 만족도가 낮아졌다. 인생성공에 본인의 좋은 학력과 부모의 부와 교육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고, 자녀세대의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지고 있다. 또한, 공동체와 관련된 환경보호 비용을 지출할 의향도 낮아졌고, 사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사회의 대부분의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도 반대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허용성도 낮아졌다.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도 줄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의 부활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주가 되살아난 것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자긍심이 높아졌는데, 지난 3년간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에 대한 자긍심의 놀랄 만한 증가는 위안거리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불안으로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른 변동성보다는 기존 익숙한 사회체제로의 복귀라는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을 해본다. 국민들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며 각자도생의 삶을 모색하는 것 같다. 코로나 종식 후의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어떤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다려진다.

참고 문헌

- 김지범·강정환·김석호·김창환·박원호·이윤석·최성수·최슬기·김솔이. 2019. 《2003-2018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지범·김솔이·강정환. 2017. “서베이조사실험을 통한 폐쇄형과 개방형 설문 응답 차이: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조사연구》 18(4): 127-147.
- 김지범·장덕현·김솔이·강정환. 2019. “조사동향: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 《조사연구》 20(1): 131-164.
- 김창환·김태호. 2020. “세대 불평등은 증가하였는가?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1999~2019.” 《한국사회학》 54(4): 161-205.
-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 보건복지부. 2021. “보도 참고 자료 2020년 자살사망자 13,195명, 전년대비 다소 감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016
- 슈밥, 클라우스·말르레, 티에리. 2021.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 메가스터디박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 유광석. 2021.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종교문항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사회》 35(2): 235-264.
- 이대웅. 2016. “기독교 인구 지난 10년 사이 정말 더 많아졌나?” 《크리스천투데이》 2016년 12월 20일자.
- 이숙인. 2014.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 이재열. 2019.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21세기북스.
- 임영빈. 2019. “한국 종교 인구 변화에 관한 코호트 분석.” 《현상과 인식》 12: 123-150.
- 정인관·최성수·황선재·최을. 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127: 12-59.
- 중앙일보. 2006. “우리의 소원은 ♪통일♪ 원래 노랫말은 ♪독립♪이었죠” 2006년 6월 21일자.

- 지재, 슬라보예. 2020. 《팬데믹 패닉》. 강우성 옮김. 북하우스.
- 최인수·윤덕환·채선애·송으뜸. 2020. 《2021 트렌드 모니터》. 시크릿하우스.
- 최재천·장하준·최재봉·홍기빈·김누리·김경일·정관용. 2020.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 하상응. 2021.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 《한국의 사회동향 2021》 (pp. 349-358). 통계청 통계개발원.
- 한준. 2021.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1》 (pp. 372-386). 통계청 통계개발원.
- 헤롤드, 이브. 2020.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트랜스휴머니즘의 현재와 미래》. 강병철 옮김. 꿈꿀자유.
- Diener, Edward, Shigehiro Oishi, and Richard E. Lucas. 2009.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R. Snyder and Shane J. Lopez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nd edition) (pp. 187-19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e, C. and M. Suh. 2017. “State Building and Religion: Explaining the Diverged Path of Religious Change in Taiwan and South Korea, 1950-198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3(2): 465-509.
- Niemi, R.G., J. Mueller, and T.W. Smith. 1989. *Trends in Public Opinion: A Compendium of Survey Data*. New York: Greenwood Press.
- Smith, T.W., J. Kim, A.Koch, and A. Park. 2006. “Social Science Research and the General Social Surveys.” *Comparative Sociology* 5(1): 33-43.
- Smith, T.W. and L. Jarkko. 1998. “A National Pride: A Cross-national Analysis.” *GSS Cross-national Report* 19. Chicago: NORC.
- Voas, D. and M. Chaves. 2016. “Is the United States a Counterexample to the Secularization The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1(5): 1517-1556.
- Yeager, D.S., S.B. Larson, J.A. Krosnick, and T. Tompson. 2011. “Measuring Americans’ Issue Priorities: A New Version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 Question Reveals more Concern about Global Warming and the Environment.” *Public Opinion Quarterly* 75(1): 125-138.

Social Trends in Korea before and after COVID-19 Pandemic, 2003-2021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Jibum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trends for the first two decades of the 21st century. Using the 2003-2021 cumulativ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I investigated how attitudes and beliefs have changed over the years pre-COVID-19, and then examined whether COVID-19 has impacted these attitudes and beliefs. Previously, while there was little change in happiness levels, there was an increasing trend of life satisfaction. However, after COVID-19, Koreans have become both less happy and less satisfied with life. Post-COVID-19, half of the population cites the economy 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facing the nation, and no other national problem received more than 16% of responses.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political environment fell from 26% in 2018 to 13% in 2021. In the 2010s, about 30% of Koreans were proud of Korea's fair and equal treatment of all groups in society, but it markedly increased to 58% in 2021. Except in 2018, sentiments of feeling closeness to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decreased since 2008, and in 2021 dipped to 5%. Koreans became less likely to agree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o reduce income difference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lso, Koreans became less likely to agree that government should provide a decent standard of living for the unemployed and more likely to agree that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benefit for the poor. Although environmental concerns have rebounded, there is a significant downtick for the willingness to pay higher prices, pay higher taxes, and accept cuts in the standard of living to protect the environment. Confidence in leaders of various institutions is generally down across the board except for an all-time high in big business (81%). 56% of Koreans are not affiliated with any religion. One out of ten Koreans agree that fortune-tellers predict the future, and two out of ten people agree that the four pillars of destiny influence one's life. While permissiveness of pre-marital sex and homosexual relations has increased over the years, permissiveness of primarily homosexual relations dropped in 2021. Expectations for children's future standard of living have decreased, and more Koreans think the wealth and education of parents are essential for getting ahead in life.

In conclusion, Koreans seem to be in survival mode under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inflicted by Covid-19.

Key words: COVID-19, social trends, KGSS, North Korea, role of government, government spending, confidence in institutions, national pride